

2019년 9월 18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월 18일(수) 10:00 부터 보도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 | | | | |
|--------|---------------|-----------------------|---------------|
| • 문의 : | 중기부 재기지원과 | 이동원 과장(042-481-1666), | 문종원 사무관(4530) |
| | 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 | 진선영 과장(02-2100-2920), | 민병철 주무관(6841) |
| | 금감원 신용감독국 | 조성민 국장(02-3145-8370) | 전동연 사무관(2936) |
| | 서울회생법원 | 권민재 공보관(02-530-2044) | 김남태 팀장(8382) |
| | 중진공 재도약성장처 | 윤용일 처장(055-751-9620) | 정대훈 팀장(9621) |
| | 캠코 기획조정실 | 이종국 실장(051-794-3030) | 한덕규 팀장(3040) |
| | SGI서울보증 경영지원실 | 정규홍 실장(02-3671-7061) | 김종우 팀장(7062) |

기관간 협업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구조 개선 지원 나선다

- 상시적 사업전환 촉진, 경영악화 방지, 회생 지원 -

① 상시적 사업전환으로 '제2의 창업' 을 촉진하겠습니다.

① 사업전환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

* 매출액 비율요건(현재 30% 이상 업종 필요) 제한 폐지, 승인소요기간 단축(30→15일)

② 혁신성장 분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후속 연계지원 강화

* 혁신성장분야에 사업전환자금의 40% 이상을 공급, 지원사업 우대(R&D, 공공구매 등)

③ 온·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한 맞춤형 사업전환 정보제공

②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겠습니다.

① 금융공공기관이 성장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찾아내어 지원

②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토대로 구조개선기업에 자금·컨설팅 지원

③ 회생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돕겠습니다.

① 법원의 채무자와 채권자간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조사위원 선임 등에 소요되는 비용(최대 3천만원) 지원

② 회생 기업에 신규 자금(연 400억원)과 이행 보증 등을 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SGI서울보증 공동 지원

③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신속한 사업정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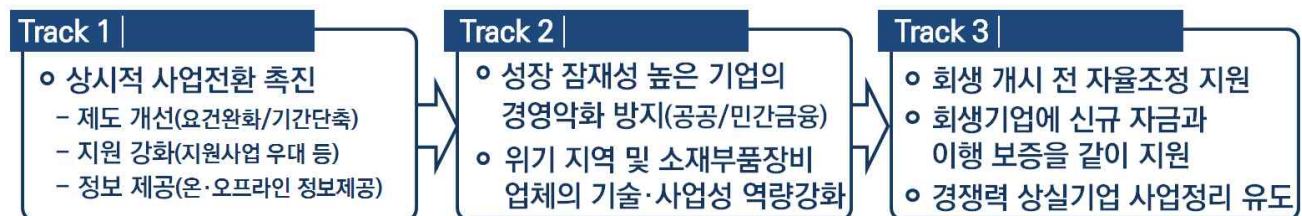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상시적 사업전환과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이 한층 원활해 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9월 18일(수)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은 조기에 살리는 것이 비용, 축적된 경험의 활용, 일자리 유지 등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업종전환 등으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며, 회생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내용 】

① 상시적 사업전환으로 '제2의 창업'을 촉진한다.

<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 >

- (개요) 중소기업이 미래 유망업종 등으로 업종 전환이나 추가 계획을 제출하면 중기부 장관이 승인하는 제도 (근거: 사업전환특별법)
- (지원사항) 사업전환 자금, 기술개발, 컨설팅, 상법상 특례 등
- (지원성과) 3년 평균 매출액과 고용률이 각각 42.6%, 20.3% 상승

정부는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 사업전환계획 승인요건 개선안 >

甲기업 영위업종	현 행	개 선
A업종(29%)	신청 불가 * 업종추가의 경우라도 매출액 30% 이상인 업종이 없으면 신청 제한	신청 가능
B업종(25%)		
C업종(25%)		
D업종(21%)		
합 계(100%)		

☞ (사례) A기업은 발전기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면서 배전반 설비와 기계장비 도매·일반 공사업 등을 겸업하고 있다. 향후 배터리 사업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기존 사업 중 **전체 매출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이 없어 신청이 거절**되었다. → **제도 개선 후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 가능**

사업전환계획 신청 후 승인까지 평균 한 달여가 소요되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계획승인 권한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위임하여 처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사업을 전환하는 것은 창업에 버금가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여 꺼려왔다. 이에 정부는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제품생산이나 시장개척 등을 할 때 필요한 자금(1.3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출바우처, 공공입찰 등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4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정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관련 정보취득도 쉽지 않았다.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②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를 방지한다.

일시적 어려움에 처했으나 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하여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지원한다. 경영이 더 악화되기 전 사전 차단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에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아울러 위기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9월중에 124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위기지역 기업의 제품 고도화,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③ 회생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돕는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라도 자율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율 조정을 위해 전문가(조사위원)를 선임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19.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생기업 금융지원(DIP금융)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회생절차 진행을 이유로 민간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연간 400억원)과 이행보증 등을 같이 지원하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추진한다.

<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 지원사항(안) >



- ▶ (중진공) 연간 50~100억원 규모 자금 및 회생컨설팅(기업당 최대 3천만원) 지원
- ▶ (캠코) 연간 300억원 규모 자금 출자 및 DIP 전문 SPC 설립
- ▶ (SGI서울보증) 계약 등 이행보증서 발급 우대 (단계별 지원확대)

상당수의 회생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려고 해도 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SGI서울보증이 공동으로 가능성 있는 회생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스톱 사업정리 대행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정리를 유도하고, 실패 기업인은 중기부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회생법원과 중기부는 기업회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개발과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역사적 성공의 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에서 비롯되었고, 역사적 실패의 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언급을 소개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문종원 사무관(☎ 042-481-4530), 민병철 주무관(6841) 또는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전동연 사무관(☎ 02-2100-29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3-Track 지원 방안

Track 1 |

상시적인 사업전환



◦ 상시적인 사업전환으로 '제2의 창업'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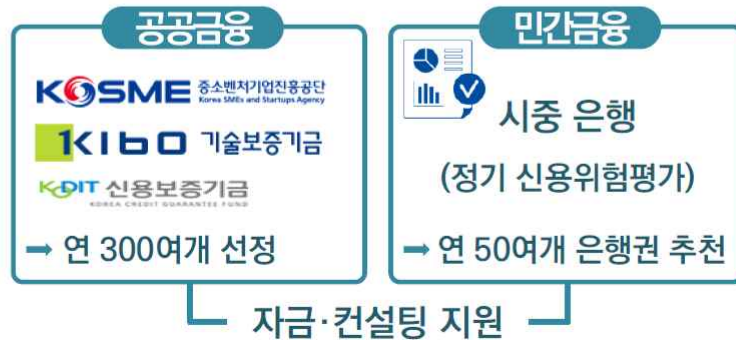
- ① 사업전환 계획 승인요건 완화로 발빠른 구조개선 활성화
- ② 혁신성장분야 사업전환자금 공급을 40% 이상 확대
- ③ 사업전환 성공기업 후속 연계 자금 등 지원('20. 1.33조원)
- ④ 자동차 내연기관 업체 등에 맞춤형 정보 제공

Track 2 |

경영악화 방지



◦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 방지



Track 3 |

회생 지원

◦ 회생 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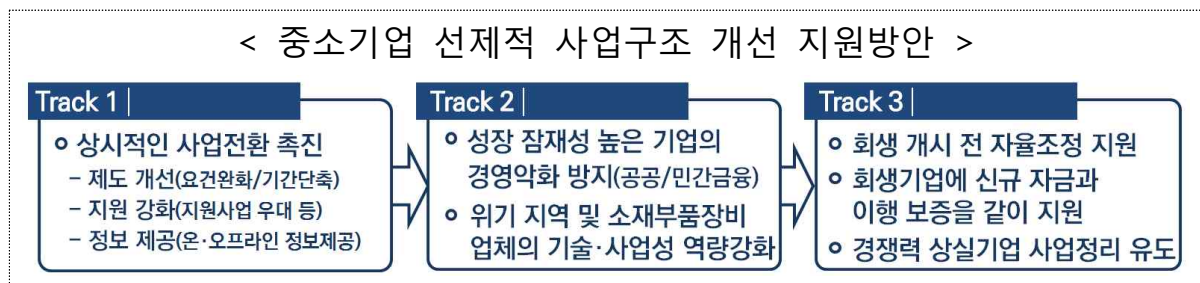


◦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 질서있는 사업정리 유도 후 재도전 지원

1. 추진배경

- 친환경·스마트化 등 4차산업혁명 분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기존 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적시 대응 시급
-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기 전 선제적 대응이 필요
- 불가피하게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자금조달 곤란 등을 경험하고 있어 회생기업 정상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요구

2. 주요 내용



① 상시적인 사업전환으로 '제2의 창업' 촉진

- **(제도개편)** 사업전환계획 승인요건을 완화(기존 매출액 비율 30%이상 → 기준삭제)하고, 승인 소요기간 단축(평균 30→15일 이내)
- **(지원강화)** 정책자금과 판로·마케팅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지식 재산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수출·R&D 등에 참여시 우대 지원하고, 사업전환 성공기업의 제품 생산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금 추가 지원(신성장자금 1.33조원 활용)
- **(정보제공)** 자동차 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부품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정보 제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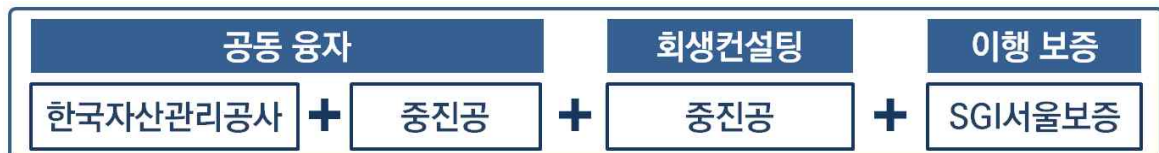
② 성장 잠재성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 방지

- 금융공공기관(중진공, 신·기보)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중 경쟁력있는 기업(300개사)을 선정하여 자금·컨설팅 등 집중 지원
 - * (운영 절차) 재무상황, 경영현황 등 실태조사 → 프로그램 지원시 정상화가 예상되는 기업 선정 → 경영기술 컨설팅, 금융 지원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
-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구조조정 기업에 자금 및 컨설팅 연계 지원 강화
- 매출감소 및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기지역 및 소재부품장비 업체의 기술·사업성 역량강화 지원('19.하, 124억원, 예비비)

③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기 지원

-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본격적인 법적절차 개시 전에, 조사위원을 통해 채권자·채무자간 사전조정을 협상하도록 'Pre-회생컨설팅' 신설
 - * 법원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과 연계
-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중 경쟁력있는 기업을 중진공·캠코가 공동 자금지원(400억원)하는 '재도약(Turn-around) 패키지' 추진
 - *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향'(금융위, '19.7) 후속 추진

<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 개요(안) >



* (중진공·캠코) 공동 용자 (SGI서울보증) 이행보증서 발급 우대

-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에 대해 실패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사업정리 지원
 - * (기존) 일반/전문컨설팅(회계 중심, 3MD) → (개선) 전문컨설팅 세분화(회계+법률, 5MD)

참고 3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 개요

-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전환 계획 수립, 정보제공, 컨설팅, 정책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사업전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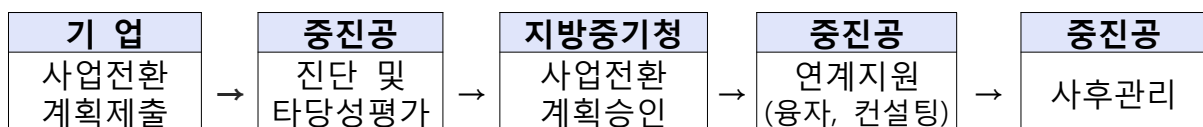
- (업종전환) 기존 업종을 양도·폐업하고 신규업종으로 100% 전환
- (업종추가) 신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비중을 30% 이상 전환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새로운 업종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서 기존업종과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세세분류(제조업), 소분류(제조업 외)가 다른 업종일 것

□ 지원절차

- 사업전환계획 승인 후 승인기업은 3년간 사업전환계획을 이행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정책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1,100억원(하반기 100억원을 기금변경으로 추가 예정) ▶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 5년 포함), 운전자금 6년(거치 3년 포함)
컨설팅	▶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30%~65% 지원
R&D	▶ 1.5억원 한도로 전체 사업비의 75% 지원
상법상 특례	▶ 사업전환을 위한 주식교환, 합병, 영업양수 시 특례 지원